

재난지원금 가구당 40만원~100만원 5월 중 지급

정부, 3차 비상경제회의의 ... 추경 7조1000억 소득 하위 70%
광주 46만·전남 65만 가구에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를 위해 7조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될 전망이다. 광주시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전체 62만 가운데 46만 가구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남은 전체 87만 가구 중 65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더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 원 수준이며, 이중 지방정부 분담분 2조 원을 제외하면 정부(2차)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정부의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안 편성, 4·15 총선 후 국회에서의 추경안 심의, 5월 중 지급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 된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 원, 2인가구는 449만 원, 3인가구는 581만 원, 4인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 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 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 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7조1000억 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이후 원 포인트 추경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



“국민에 위로·응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n번방 반인륜적 범죄 TF 구성 근절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인터넷 메시지를 이용한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희동을 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로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 가구 168만7000가구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된다. 이들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 원씩 4개월분,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4인 가구가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지급액은 320만 원에 달하게 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야 호남권 선대위 출범 ... 본격 선거전 돌입

총선 D-15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호남권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개호 국회의원) 출범식을 여는 등 여·야 각당이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

제21대 총선 민주당 호남권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의원)는 31일 광주시의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민주당 호남권 선대위는 수석 대변인에 장세일 전남도의원, 대변인에는 신수정·이정환 광주시의원, 국주영은·김경수 전북도의원, 홍지영 현 전남도당 대변인 등을 임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선대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호남 선대위'의 공동위원장은 이개호·서삼석·송갑석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포진했다.

앞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4일 서삼

석 도당 상임선대위원장, 지역구 10곳 후보자,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바 있다. 출범식 강행으로 얻는 것보다 코로나 19 감염 차단을 위한 정부의 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동참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생당 광주시당도 오는 4월 2일 출범식을 대신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한다.

도 30일 민생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5·18 정신을 바탕으로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과 열음장 같은 냉철함으로 엄정히 선택할 광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민생당 민생선대위에서 인본분위의 선택 투표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민생당 전남도당도 내달 1일 목포 육양동에 자리 잡은 도당 사무실에서 후보자, 당직자 등 필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선거출정식을 연다는 계획이다. 민생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그래도 총선인데 출정식은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부 여론에 따라 조촐하게 행사를 준비 중"이라며 "코로나 19 감염 차단을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방역 절차를 준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20일 전남도의회에서 개최한 공약발표 기자회견으로 총선 출범식을 갈음했다. 코로나 19 감염 차단을 위해서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윤소하(목포)·강병택(순천·광양·곡성·구례)·이경자(순천·광양·곡성·구례)·김진수(여수) 후보와 이보라미 도당위원장(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해 공약을 내놓고, 지지를 당부했다.

나주·화산(안주)·순천·광양·구례·곡성·갑을(김선동·유현주) 등 전남에서 3명의 후보자를 낸 민중당 전남도당의 경우 선대위 출정식 개최 여부를 놓고 내부 여론을 수렴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초중고 4월 6일 온라인 개학? 고3만 등교?

교육부, 오늘 발표...수시모집·수능 등 대입 일정 순연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누그러들지 않는 탓에 전국 학교 교원이 4월 중순 이후까지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개학 예정일로 발표한 4월 6일에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할지, 고

3이나 고등학교 일부 학년·학교급만 등교를 시작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수업할지 등을 막판 고심 중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1일 추가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여부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에 수십명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미성년 확진자도 매일 증가하는 점 등 때문에 집합수업 개시(오프라인 등교 개학)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6일에도 개학을 하지 않는다면 개학은 최대 4월 17일까지 미룰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업일수 감축 정도가 커 한 해 교육과정을 온전히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 4월 17일 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든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교육부는 원격수업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이 전국 학교에 배포됐다.

교육부는 이제 4월 6일에 초·중·고를 모두 온라인으로 개학할지,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급·학년만 온라인으로 개학할지, 개학을 4월 13~17일로 미룰지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교통사고 줄이기!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

음주/과속운전 하지 않기

시내버스/지하철 이용하기

광주시민이
모두 함께해요!